

북한 핵문제 동향과 전망

이 동 진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외정책연구실



북

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90년대 전반부에 걸쳐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 시키면서 복잡 다기하고 긴박하게 전개되었던 북한 핵문제는, 94년 10월 21일 미국과 북한간 기본 합의의 타결을 기해 합의 내용의 이행 상황 및 그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문제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소 단순화된 채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대체로 볼 때 현재로서도 최소한 북한의 핵활동이 동결 상태에 있으며, 사용후 연료봉의 밀봉 작업도 진행중에 있는 만큼 긴박한 상황은 일단 넘겼다고 볼 수 있지만, 북·미 합의의 구조 자체가 쌍방간에 이행하여

야 할 개개의 조치를 주고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대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의 완료와 그에 따른 북한 핵시설의 해체,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 사용후 연료봉의 제3국 이전 등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의 사항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다시 말해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정세, 나아가 동북아 정세라는 보다 거시적인 국제 정치적 상황에 의해 규율을 받고 있는 만큼, 또다시 어떤 돌발적인 변수의 발생으로 사태가 의외의 방향으로 굴절될 지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북·미 기본 합의의 이행 상황을 포함한 전반적 정세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예의 추적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미 기본합의문에 나타난 합의 내용을 각 항목별로 재정리해 보고, 그 진척 상황 및 현안 사항을 특히 지난해 이래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을 중심으로 점검해 본 후, 남은 과제와 향후에 진행될

과정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북·미 합의의 이행 상황

1. NPT 복귀와 수시·일반 사찰

합의 내용(요약)

북한은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되는 대로 93년 3월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철회, 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면안전조치협정의 이행을 수용,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수시 및 일반 사찰을 허용하고, 그 이전에도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안전 조치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IAEA가 요구하는 사찰을 수용한다.

북한이 93년 6월 11일 자신들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효력을 유보하기로 한 이래 아직까지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북한은 '특수 지위'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은 경수로공급협정의 체결과 함께 탈퇴의 효력이 실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에 관계 없이 95년 6월 동결 대상이 아닌 3개 시설에서 IAEA의 사찰이 이루어졌으며, 동결 대상 시설에 관해서는 5MWe 시험 원전과 방사화학실험실의 보수시 IAEA 사찰관의 입회가 이루어졌다.

95년 12월 북한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간에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된 후 북한은 IRT-2000 연구용 원자로, 임계 시설, 준임계 시설, 핵연료 저장 시설 등에 있는 핵물질에 관한 계량 기록과 시설의 지역(LOF) 목록 개정판 및 관련 보고서의 제출을 약속하면서, 96년 3월에 LOF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96년 5월에 시작된 사용후 연료봉의 밀봉 작업시 IAEA 사찰관은 연료봉 측정을 실시하였으나, 잔존 플루토늄의 양에 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96년 6월에 있었던 IAEA와의 기술 협의를 전향점으로 북한은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북한의 IAEA에 대한 최초 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 확인 작업에 관해서도 전향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또 그때까지 3~4명 선으로 유지되어 오던 사찰관에다 9명을 증원하자는 IAEA의 요구도 수용하였다.

그러나 동결 시설에 관한 북한의 보고 문제, 폐기물 탱크 감시 장치 설치 문제,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측

정 및 샘플 채취 문제 등 여타의 쟁점에 관해서는 96년 9월까지 양측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핵동결 및 관련 시설 해제

합의 내용(요약)

북한은 경수로 등의 제공에 관한 미국 대통령령의 보장 서한을 받는 즉시 군사 핵활동의 개인성이 있는 흑연 감속로 및 관련 시설의 동결에 착수하여, 합의문 서명 1개월 이내에 모든 관련 조치를 완료하고, 동결 기간중 IAEA의 감시 활동에 협조하며, 경수로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들을 완전히 해제한다.

북한의 핵활동 동결 및 관련 시설의 해체는 북한의 현재와 미래의 군사 핵활동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북·미 합의에 따라 동결하기로 되어 있는 북한의 흑연 감속로 및 관련 시설은 구체적으로 ① 영변의 5MWe 시험 원전 ② 영변의 방사화학실험실 ③ 영변의 핵연료 가공 공장 ④ 영변에 건설중이던 50MWe 원자로 ⑤ 태천에 건설중이던 200MWe 원자로 등이었다.

북한은 북·미 기본합의문 서명 직후인 94년 11월 1일 50MWe 및 200MWe 흑연 감속로의 건설 작업과 5MWe 시험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였으며, 재장전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핵연료봉 신제품들도 제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11월 22일 기술 협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IAEA의 협상단은 모든 동결 대상 시설의 현장도 방문하여 이들의 가동 및 건설 중단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핵동결 및 그 확인 작업은 95년 4월 경수로공급협정 체결 협상의 결렬로 북한이 동결 해제를 위협하는 등 한때 위기를 맞았다가, 6월의 팔라룸푸르 북·미 준고위급회담의 성사를 계기로 정상을 되찾아 현재까지 큰 문제 없이 동결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3. 대북 경수로 지원

합의 내용(요약)

북한의 흑연 감속로 체계를 경수로 체계로 대체하기 위해 미국은 2003년을 목표 시한으로 2,000MWe 상당의 경수로를 북한에 건설하는 것을 책임지고 추천하며, 이를 위한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 이를 대표하여 북한과 경수로공급협정을 체결한다. 또 양국은 필요에 따라 원자력평화이용협력협정을 체결한다.

북·미 기본합의문 체결 이후 가장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 노형을 한국형으로 하고 한국이 건설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문제가 95년 6월 13일 북·미 팔라룸푸르 준고위급회담을 통해 해결되고, 이를 기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대북 경수로 공급의

주역으로 나서서 95년 12월 15일 북한과 경수로공급협정을 체결하고, 96년 3월 19일 KEDO가 한국전력공사를 주계약자로 지정함으로써 경수로 건설을 위한 기본 열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상업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부지 조사, 기본 공정표 작성, 개략 사업비 추정 등 주계약자로서의 업무를 사업 전 용역 계약(PPS)을 통해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KEDO와 한국전력공사는 95년 8월부터 96년 7월까지 총 6차에 걸친 면밀한 부지 조사를 통해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리 일대 약 100만평을 경수로 건설 부지로 사실상 확정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96년 7월말 경수로 2기의 건설 비용 약 49억달러, 부지·항만·도로·변전 시설 등의 건설 비용 약 11억달러 등 도합 약 60억달러에 이르는 북한 경수로 건설을 위한 개략 사업비(ROM Rough Order of Magnitude)를 산출하여 KEDO에 통보하였다.

참조 발전소인 울진 3·4호기 건설비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게 산정된 것은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북한의 사회 간접 자본 및 북한 노무 인력 사용에 따른 불확실성, 물류 비용의 증대 등이 감안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KEDO 집행 이사국 3국 중 한·미 양국은 아직까지 이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은 이

를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96년 4월부터는 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공급협정의 후속 의정서 체결 협상이 시작되어 5월 22일 「특권·면제 및 영사 보호에 관한 의정서」, 6월 14일 「통행에 관한 의정서」 및 「통신에 관한 의정서」가 타결되고, 한국측 사무차장이 포함된 KEDO 협상단과 북한측간에 7월말부터 북한의 묘향산 등에서 이루어진 협상을 통해 9월 26일에는 「부지 인수에 관한 의정서」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의정서」에 관한 문안을 확정, 97년 1월 8일 이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공사 착공에 당장 필요한 법적 기초는 일단 모두 갖춰진 셈이며, 나머지 의정서는 공사가 시작된 후에 체결해도 지장이 없는 것들이다.

이들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특권·면제 및 영사 보호 의정서

KEDO 및 그 계약 업체는 유엔 등 국제 기구와 유사한 위상을 가지며, 계약 체결,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소송 제기, 북한의 관련 당국과의 협상 등을 할 수 있다.

신포 현지의 KEDO 사무소는 KEDO 및 계약 업체 직원, 선박 및 항공기 승무원 등에 대한 영사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북한은 이들을 체포·구금하거나 이들의 재산을 압수·수색할 수 없

며, KEDO는 부지 안에서 자체 질서 유지권을 가진다.

KEDO 직원과 회원국 정부 대표는 외교관 수준의 특권·면제를 누리고, 이들을 위해 무비자, 보세 구역 설정 등 특례적 출입 및 통관 절차를 마련한다.

나. 통신 의정서

KEDO와 주계약자는 사업 초기부터 휴대용 전화나 구내 통신(위키 토키)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북한의 통신 수단을 통해 제3국과 통화할 수 있으며, 착공 후 2년 시점부터는 독자적인 위성 통신을 운영할 수 있다.

북한은 부지 현장과의 문서 수발 및 우편 서비스도 보장한다.

다. 통행 의정서

인원은 주로 항공편으로, 물자는 선박편으로 수송하며, 항공편은 우선은 베이징-선덕 노선을 이용하되, 추후 다시 협의한다.

바지선을 통한 해상 수송은 연안에서 15~20마일 떨어진 해로를 통해 군사 경계 구역을 통과해 북한 영해로 진입한다.

직항로 및 판문점 경유 문제는 추후 다시 협의한다.

라. 부지 인수 의정서

북한은 경수로 사업을 위해 발전소 건설 부지, 노동자 임시 숙소, 부지 연결 도로, 남대천 일대 골짜기 채취장 등의 용도로 신포시 일대 270만평을 KEDO쪽에 일괄 제공한다.

여기에는 발전소 냉각수 취수와 용

수 공급, 건설 관계자들의 휴식 등을 위한 신포 앞바다 100만평도 포함된다.

마. 서비스 이용 의정서

북한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북한 합영 회사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월 80~120달러 수준)에다 경수로 사업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기본급은 북한 정부에 지급하며, 성과급은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그러나 96년 9월에 발생한 북한 잠수함의 동해안 침투 사건으로 인해 제7차 부지조사단의 신포 파견, 문안 작업까지 마친 상태였던 KEDO와 북한간 2개 후속 의정서의 서명 등이 보류되고, 96년 11월말로 잡고 있던 경수로 공사 착공 계획도 연기되는 등 상당한 곡절을 겪다가 96년 12월 말 북한의 사과로 간신히 정상 궤도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경수로 건설 재원 조달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째 안전과 직결된 핵심적 분야 이외에는 북한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둘째 경수로 건설을 위한 국채를 발행,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와 시공 업체들로 하여금 이를 매입토록 함으로써 업체들이 스스로 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측에서도 경수로 건설 사업의 원활한 진척을 위해 허종 특별 대사를 대표로 하여 약 30여명의 외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팀을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원전사업부'로 알려진 이 조직은 한국의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에 상응하는 조직으로서, 북한측에서 경수로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또한 신포 경수로 부지를 나진-선봉 자유 무역 지대처럼 세급 및 임금과 관련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특구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포 특구의 책임자로는 전 짐바브웨 주재 북한 대사 이명철, 또는 성명 미상의 전 나미비아 주재 북한 대사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대북한 대체 에너지 제공

합의 내용(요약)

미국은 국제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북한의 흑연 감소로 가동 및 건설 중지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를 경수로 1기가 완공될 때까지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주선했다. 제공될 에너지는 중유로 하며, 제공 규모는 연간 최대 50만톤으로 한다.

합의에 따라 미국은 95년 1월 21일 1년차분(94년분) 5만톤을 시작으로 95년중에 2년차분 10만톤의 중유를 북한에 인도하고, 96년의 3년차분

50만톤에 대해서는 일본의 지원을 받아 KEDO의 이름으로 인도를 완료할 수 있었다.

제공된 중유는 1,500MWe 규모의 북창화력 등에서 발전용으로 충분히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경수로 1기가 완공될 때까지 앞으로 매년 50만톤의 중유 제공을 책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약 5천만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은 예산 확보에 있어 국내적으로 야당인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동의를 얻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의 약속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1년여의 협상 끝에 다행히 97년초 유럽연합(EU)이 KEDO의 집행이사국으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5년간 매년 1,500만ECU(1,900만달러)의 중유 제공 비용을 지원한다는 데 동의함으로써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집행이사국 참여는 의사 결정에 있어 거부권을 제한받는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가하여 KEDO는 중유 제공 비용에 관한 아세안 국가들의 기여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 성과가 없다.

5. 사용후 연료봉 처리·보관과 제3국 이전

합의 내용(요약)

영변의 5MWe 시험 원전에서 인출한

사용후 핵연료봉은 북한 내에 안전하게 보관하였다가 경수로 1기 완공 시점에 서 제3국으로 이전한다.

미국과 북한은 5MWe 시험 원전 내의 냉각 수조에 보관하고 있던 801 다발(8,010개)의 사용후 연료봉의 안전한 처리와 보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그동안 2차례의 전문가 협의와 4차례의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기술적 조건들을 점검한 끝에, 95년 6월 말 이래 미국의 전문 업체인 NAC (NAC Services Inc.)사가 영변 지역에 특수 처리 공장을 세워 밀봉(canning)을 위한 화학 처리 작업을 해 왔으며, IAEA와 북한간에도 이를 위한 여러 차례 별도의 기술 협의가 있었다.

그 결과 미국은 96년 5월 1일 사용후 연료봉의 밀봉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밀봉 작업은 사용후 연료봉을 철제 용기(켄)에 집어 넣어 밀폐하는 작업이다.

밀봉 작업은 IAEA의 감독하에 미국 에너지부(DOE) 소속 전문가들과 NAC사의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다.

밀봉된 사용후 연료봉은 다시 냉각 수조에 넣어져 궁극적으로 북한 바깥으로 반출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된다.

일단 이같이 밀봉되고 나면 재처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북한은 다시 이를 협상 카드로 사용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북한의 핵위협은 사용후 연료봉에서 비롯되었음에 비취, 이의 밀봉 착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미국도 이에 대해 큰 만족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되던 밀봉 작업은 같은해 11월까지 약 50%가 완료된 상태에서 북한의 잠수함 침투 사건의 여파로 중단되었다가 97년 1월 중순에 재개되었다.

이에 맞춰 미국은 봉인 작업을 감독하기 위해 영변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6. 특별 사찰

합의 내용(요약)

북한은 경수로 핵심 부품 인도 이전에 IAEA가 북한 내의 핵물질에 관한 북한의 최초 신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IAEA가 요구하는 장소에 대한 사찰, 즉 사실상의 특별 사찰의 수용을 포함하여 안전조치협정(INFCIRC/403)상의 의무를 전면 이행한다.

북한의 과거 핵활동 규명을 위해 긴요하며, 북한의 NPT 탈퇴 사태와 그에 따른 전쟁 불사 공방 등 총체적 파란의 씨앗이 되었던,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로 보이는 2개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 문제는, 북한 경수로 건설을 위한 핵심 부품이 인

도될 때까지 최소한 5년 정도 그 관철이 늦추어졌다.

따라서 당분간은 이에 관해 특기할 만한 상황의 발전은 없을 것이다.

다만 IAEA는 추후에 실시될 특별 사찰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와 자료의 원상 보전을 위한 조치를 북한에 대해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특수 지위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특별 사찰 실시의 연기는 미국이 북한의 과거 핵활동 규명에 더이상 연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7. 북·미 관계 개선

합의 내용(요약)

양측은 영사 및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제네바 합의 후 3개월 이내에 통신 및 금융 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완화시키는 조치에 착수하며, 상호 관심사의 진척 상황에 맞춰 양국 관계를 대수급으로 격상시킨다.

북·미 기본 합의에 담긴 미국의 기본 의도는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감으로써 북한을 국제 사회에 동참시킨다는 데 있었으며, 북한 또한 옛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맹방들이 사라진 데 따른 정치적·경제적 고립으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대서방 관계 개선, 특히 대미 수교를

통해 극복하고자 기대하고 있다.

96년 들어 북·미 양국은 1월초와 4월말 각각 한국전쟁 실종미군유해 송환협상 및 미사일비확산협상을 가진 끝에 유해 발굴을 위한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7, 8월 2차례에 걸쳐 발굴 작업을 벌이는 등 상당한 접근을 이루었다.

11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북·미 관계의 진전을 외교 분야의 치적으로 삼기 위해 스펜스 리차드슨 의원을 같은 해 8월말 평양에 파견, 연락사무소 개설 작업을 서둘렀다.

그러나 관계 개선을 바라는 양측의 기본 입장이 일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네바 합의 후 2년이 지나도록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에 진전이 없는 것은, 북한이 그들의 워싱턴 연락사무소 개설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평양 사무소 개설에 관해서도 북한이 영사 및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해 지나친 제한을 거는 등, 소극적 자세로 돌아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락사무소 개설 여부에 관계 없이 북한은 그들의 뉴욕 유엔대표부를 대미 접촉 창구로서 십분 활용해 왔으며, 사용후 연료봉 밀봉 작업을 위한 행정 지원 명목으로 96년 2월 이래 북한의 영변에 상주하고 있는 미국의 관리들도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뉴욕 창구'에 상응하는 미국의 '평양 창구'로서의 정치적 기능을 하

여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 관계에 있어서는 95년초 미국과 북한 양쪽에서 제한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기는 하였으나, 북한은 미국의 제1차 경제 재개 완화 조치가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평가, 불만을 나타내었다.

추가 완화 조치는 북한의 테러리즘 지원 포기 보장을 선행 조건으로 내걸어 실현되지 않고 있다가, 북한이 대남 잠수함 침투에 대해 한국에 사과함에 따라 미국을 97년 1월초 곡물 중개상 카길(Cargill)사에 대해 대북한 곡물 50만톤의 수출을 허용하게 되었다.

현재 대금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북한측과 카길사간의 상담이 교착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상담이 성사될 경우 이는 최초의 북·미 상업 거래가 될 것이다.

8. 남북한 대화 착수

합의 내용(요약)

북한은 남북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동시에 남북 대화에 착수하고,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이의 사용을 위협하지도 않을 것을 보장한다.

남북한 관계 개선은 북·미 합의 사항 중 아직까지 가장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96년에 들어서도 남한쪽에서 4월의 총선 국면 등을 거치면서 북한 문제 대처에 소홀해 지고, 북한도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체제의 결속과 유지를 위해서는 남한과의 관계 개선이 득될 것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남북한 관계 개선은 담보를 면치 못하였다.

더욱이 지난해에 터진 북한 잠수함의 동해 침투 사건은 그나마 한발한 발 진척되어 오던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과 한반도 관련 4자 회담 성사 노력 등 남북한 문제 관련 현안 전반을 일순 풍풍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 북한이 잠수함 사건에 대해 사과함으로써 간신히 경색 국면이 풀리고, 이들 문제가 제 궤도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남은 과제와 전망

북한의 동해 잠수함 침투 사건으로 극한으로 치닫던 남북 관계가 지난해 말 북한의 사과를 전기로 해빙의 국면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97년에는 북한 관련 현안들의 진척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한 경수로 건설과 관련하여 1월 8일 KEDO와 북한간에 건설의 착수에 긴요한 부지 인수 및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2개 후속 의정서가 체결됨으로써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KEDO는 그간 보류되

었던 7차 부지조사단을 2월말 신포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이번 조사단은 시추 작업을 통한 지질 검사 및 각종 수리·물리 탐사, 탄성파에 의한 단층 검사 등을 통해 실제 원자로 건설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의 확보를 위한 것이다.

북한은 이번의 조사 결과 나올 KEDO의 부지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후 부지 인수증을 발급하게 된다.

그리고 나면 부지 정지 공사를 착공함으로써 경수로 건설 작업이 본격적인 단계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정지 공사 착공에 앞서 필요한 인원의 입국 절차와 물자의 수송 경로 및 통신, 인력·전력 사용 등 인프라 정비 등 구체적 문제들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2월말 방북하는 KEDO 부지조사단은 이와 관련된 임무도 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지 공사를 위해서는 불도저, 포크레인, 덤프 트럭 등 우리 측의 대형 중장비와 상당 규모의 건설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KEDO는 신포 현지 사무소 설립 준비에 들어가야 하며, 부지 내 자체 질서 유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 작업에 당장 필요한 비용도 마련해야 하며, 한국전력공사는 북한과 임금 계약도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실무적 문제들의 처리에는 약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여,

여건이 순조롭게 갖춰질 경우 정지 공사 착공 시기는 3~4월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착공 약 2주일 전에 KEDO의 현지 사무소가 개설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과 미국은 이미 현지 사무소에 주재할 자국의 대표까지 선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부지 공사의 조기 착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KEDO도 북한의 반발 소지를 고려할 때 착공을 무한정 미룰 수 없는 입장이다.

KEDO와 북한간의 잔여 후속 의정서 협상도 곧 시작되어야 한다.

경수로공급협정의 후속으로 체결하기로 되어 있는 의정서는 총 13개 정도이다.

경수로공급협정에는 후속 의정서의 체결 일정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96년 하반기 중에 특권·면제, 통행, 통신, 부지 인수, 서비스 이용, 품질 보증, 의무 불이행시 조치 등 7개 의정서를, 97년 상반기중에 훈련 프로그램, 인도 일정과 북한의 의무 사항 이행 등 2개 의정서를 타결하기로 되어 있으며, 경수로 가격 조건, 안전 점검, 핵사고시 처리, 사용후 핵연료 처리 등 4개 의정서에 대해서는 일정을 못박지 않고 있다.

이 중 현재까지 특권·면제, 통행, 통신, 부지 인수, 서비스 이용 등 5개의 의정서가 체결되어 목표에 약간 못미치고 있다.

KEDO는 최대한 이 목표에 맞춰

후속 의정서들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KEDO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개략 사업비(ROM)를 기초로 기술 자문 회사인 듀크 엔지니어링사에 의뢰하여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집행 이사국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비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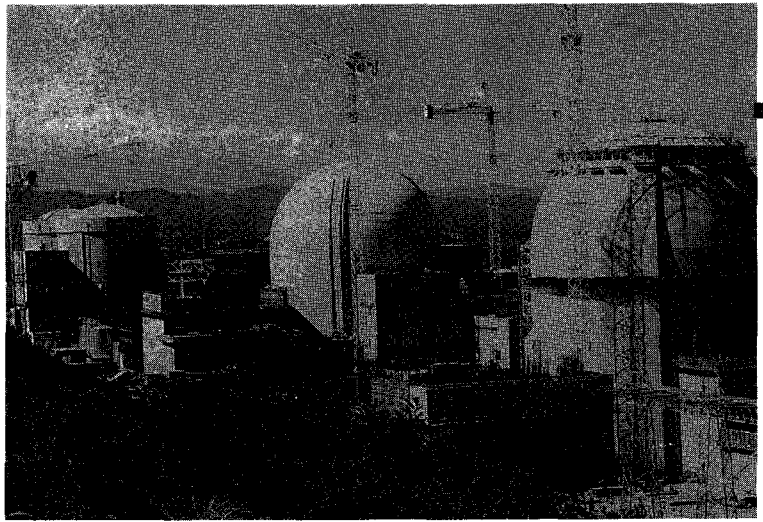
이를 근거로 한국·미국·일본간의 개정 분담 협상도 곧 시작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97년 상반기 중 KEDO와 한국전력공사간의 경수로공급상업계약도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공사비 분담과 관련, 일본은 96년 7월 당시 그들이 추정한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약 9억달러를 부담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탐색한 바 있다.

총공사비 중 한국이 가장 큰 몫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어차피 발생하게 될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하에서 정부는 조속히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들의 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 규제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며, KEDO 등에 대한 기술 지원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 임기를 시작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97년 2월초 의회에서 북·미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



한국 표준형 원전인 울진 3·4호기의 건설 모습

면서 이를 위한 의회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는 그가 이제까지 일관되게 견지해 왔던 대북한 개입 정책을 그의 2기 임기 중 더욱 과감하게 추진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어 온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도 조만간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 확실하다.

이제까지 미국의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온 미국측 외교 행낭의 판문점 통과 허용 요구를 북한이 수용함으로써, 미국은 곧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초대 평양 연락사무소장을 내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도 올해중 북·미 관계가 진전될 경우 워싱턴사무소 개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4차 회담 참여와 미사일 개발·수출 중단의 조건으로 미국의 곡물 지원과 대북한 경제 제재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97년 1월초 카길사의 대북 곡물 50만톤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이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대북 중유 제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국내적으로 의회의 예산 승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나, KEDO 집행이사국으로 새로 참여하게 된 유럽연합의 지원 약속으로 올해 이후

이를 위한 재원 조달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97년 1월 중순 재개된 북한의 사 용후 연료봉 밀봉 작업은 2월초 현재 총 8,010개의 연료봉 중 약 4,200개가 완료되었다.

특별한 지연 사유가 없는 한 밀봉 작업은 향후 6~8개월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밀봉 작업이 완료되어 궁극적으로 제3국으로 이전되고 나면, 북한핵과 관련된 불안 요소는 실질적으로 해소된다고 볼 수 있다.

96년 내내 냉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남북한 관계가 새해에 접어들면서 전기를 맞게 됨으로써, 올해는 일단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한간 현안 사항 전반이 정상적인 흐름을 되찾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과거 원자력과 관련한 남북한간 문제가 예기치 못한 정치적 변수로 인해 파행과 굴절이 연출되곤 하였던 사례들을 보아 온 우리로서는 막연한 낙관론에만 기대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의 주도로 북한에 한국형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결정되었던 당시,

우리 원자력계에 모아졌던 거국적 주목과 기대를 우리는 기억한다.

그것은 원자력이 최초의 본격적인 남북간 교류 협력의 길을 틔우므로써, 궁극적으로 50여년간 지속되어 온 민족 분단사의 질곡을 청산하는 대역사의 전위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였다.

이에 우리 원자력계는 그간 축적된 기술적 역량과 확대된 산업적·정치적·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민족적 진로를 대국적으로 조망하는 가운데, 스스로 담당해야 할 역할을 찾는 동시에 이를 위한 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막중한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분단 한국의 원자력계는 부모간 불화 관계의 제물이 되어 운명만을 원망하여 불운한 삶을 감수하는 나약한 자식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감쪽한 기지를 발휘하여 서로 돌아선 부모로 하여금 손을 잡게 만드는 화해의 드라마를 연출함으로써 자신과 가족 전체를 불운의 늪으로부터 구원하는 영특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